

#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규제개혁 동향: 거래정보 보고와 지표금리 개혁

2017. 2. 9.

연구위원 백 인 석  
자본시장연구원  
금융안정센터



1.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주요 글로벌 규제개혁
2. 단기금융거래 정보 보고
3. 지표금리(벤치마크) 개혁
4. 정책적 시사점



# 1.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주요 글로벌 규제개혁

#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규제개혁: 배경

## ❖ '08년 금융위기 당시 단기금융시장이 위기의 심화 · 확산을 유발하며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훼손에 크게 기여

- 금융위기 이전까지 글로벌 규제당국과 시장참여자간에는 단기금융시장이 시장 규율이 작동하는 효율적 시장이라는 믿음이 팽배
- 하지만 많은 금융기관들의 초단기 자금거래를 통한 과도한 위험선호와 레버리지 축적이 만연하였으며, 지표금리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 → '**시장규율의 실패**'
- 규제당국이 단기금융거래를 통해 축적된 시스템 리스크를 적시에 모니터링 하지 못한 결과 금융안정을 위해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 → '**규제의 실패**'

## ❖ 금융위기 이후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규제개혁이 진행 중

- 금융기관의 단기금융거래를 제한함과 동시에 규제당국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
-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표금리의 산출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공적 규율을 대폭 강화

#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주요 글로벌 규제개혁: 요약

- ❖ 금융위기를 계기로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규제 패러다임이 사적 규율 중심에서 공적 규율로 전환
  - **규제개혁의 글로벌 공조**: G20 합의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(FSB), 바젤은행감독위원회(BCBS), 국제증권감독기구(IOSCO)가 주도

## 주요 글로벌 규제개혁

금융기관의  
단기금융거래 규율

- 바젤 III: 자본규제, 유동성 규제, 레버리지비율 규제
- FSB: 담보부 거래 규제

관계당국의  
시장 모니터링 강화

- FSB 주도로 미국과 유럽에서 **단기금융거래 정보의 보고를 의무화**

지표금리 산출의  
투명성과 신뢰도 제고

- FSB/IOSCO 주도하에 유럽을 중심으로 **주요 지표금리의 산출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공적 규율을 강화**

거래정보 보고 · 지표금리 활동 규율 → 국내 **‘단기금융시장법’**

## 2. 단기금융거래 정보의 보고



# 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의 보고 의무화

- ❖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관계당국의 시장 모니터링을 위해 금융기관의 거래정보 보고 의무화가 추진 중
  - 금융안정위원회(FSB)는 단기금융시장에서 시스템 리스크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요건으로 관계당국의 거래정보 수집을 권고
  - 미국과 유럽의 관계당국은 금융안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거래정보의 보고 의무화를 추진
- ❖ 개별 금융기관이 규제당국 또는 중앙은행에 일별로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직접 보고
  - 추진 현황) 국가별로 거래정보 보고를 위한 입법이 추진 중이거나 입법 후 보고가 시작되는 단계
  - 거래내역 보고를 위해 개별 금융기관이 관련 전산인프라를 구축

# 미국과 유럽의 거래정보 보고를 위한 규율현황 I

지역	담당기관 / 법령	보고주체 / 보고내용	추진경과
EU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럽증권감독기구(ESMA)</li> <li>- 증권파이낸싱 거래에 관한 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모든 금융기관, 일반기업</li> <li>- 담보부 거래</li> </ul>	'16.1월 입법완료 '18.4월 시행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럽중앙은행</li> <li>- 단기금융시장 통계 보고에 관한 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은행</li> <li>- 담보부 거래, 무담보부 거래</li> </ul>	'16.7월 시행
영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영란은행/건전성 규제당국(PRA)</li> <li>- 영란은행법에 기초한 스털링 단기 금융시장 통계 수집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은행, 대형 금융투자회사</li> <li>- 담보부 거래, 무담보부 거래</li> </ul>	'16년 하반기 시행
미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뉴욕 연준</li> <li>- 연준법에 기초한 선별적 단기금융 시장 거래내역 보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은행</li> <li>- 일부 무담보부 거래</li> </ul>	'14.3월 시행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뉴욕 연준</li> <li>- Tri-party repo시장 개혁 TF 권고에 따른 거래정보 수집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청산은행 (JPMC, BNYM)</li> <li>- Tri-party repo시장의 거래내역</li> </ul>	'10.5월 시행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SEC, 금융조사국(OFI), 뉴욕 연준 (양자간 Repo시장의 거래정보 수집)</li> <li>- 도드-프랭크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공개</li> </ul>	'16.11월 시행



# 미국과 유럽의 거래정보 보고를 위한 규율현황 II

- ❖ **거래정보의 보고를 위한 통합적 규율이 정립되지 못해 규제기관과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정보를 수집**
  - 규제당국과 중앙은행이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가 다르고,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규제대상 금융기관(은행, 비은행 금융기관, 일반기업)도 상이
  - 금융기관이 동일한 거래정보를 규제당국과 중앙은행에 별도로 보고
- ❖ **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며, 특히 거래정보의 공시와 관련된 규율이 정립되지 못함**
  - 시장 효율화를 위해서는 참여자간에 핵심 시장현황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
  - 미국과 유럽에서 단기금융시장 관련 정보의 공시는 일부 섹터에 대해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
  - 향후 수집된 정보를 가공해 공시할 예정

### 3. 지표금리(벤치마크) 개혁



# 글로벌 벤치마크 개혁 추진경과

- ❖ 유럽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표금리의 신뢰도와 투명성 회복을 목표로 규제개혁이 추진 중
  - Libor-Euribor 사건이 시장규율에 의존한 지표금리의 산출과 관리에서 비롯되었다는 문제의식
  - 지표금리 관리기관을 규제대상에 포함·지표금리 산출 방법 및 과정의 투명성 제고·지표금리 산출을 위한 데이터의 적정성 확보 ➡ 이해상충의 방지·지표금리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제고

## 글로벌 벤치마크 개혁 추진경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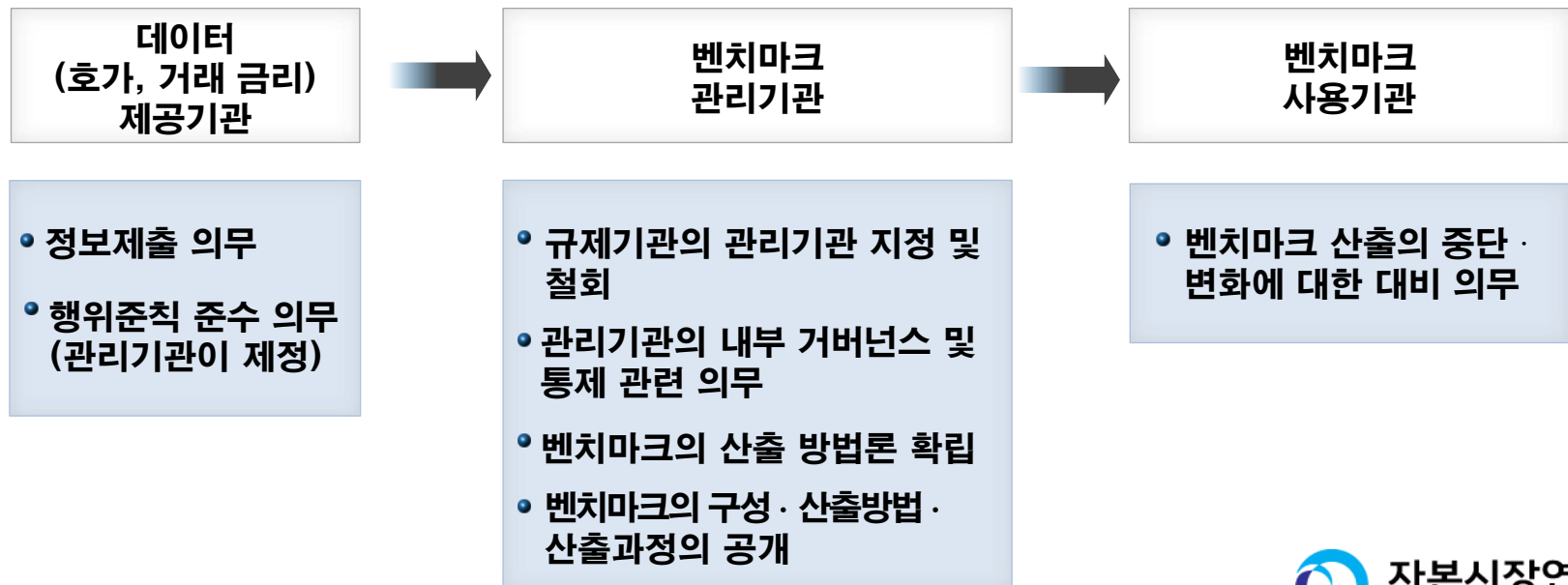


# EU 벤치마크(지표금리)법 I

## ❖ '벤치마크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'을 규제대상에 포함

- 벤치마크 관련 활동: 벤치마크 산출을 위한 정보 제공, 벤치마크의 산출·관리·공시, 벤치마크 사용
  - 벤치마크(지표금리): 금융거래의 채권·채무가액, 금융상품의 가치산정 및 투자펀드의 성과측정 등에 준거가 되는 지수 → 금리 벤치마크와 상품 벤치마크
    - ➡ 금리 벤치마크: 은행간 무담보거래, CD, CP, OIS, Repo, 외환 선도·선물·옵션 등
    - ➡ 상품 벤치마크: 금속·에너지·농산물 등 인도 가능한 모든 상품
- 벤치마크의 구분: **핵심(critical)** · 중요(significant) · 기타(non-significant) 벤치마크

## EU 벤치마크법 체계



# EU 벤치마크(지표금리)법 II

## ❖ 핵심 벤치마크의 선정

- 벤치마크와 연관된 금융상품·금융계약·성과평가 대상 투자펀드의 규모(연관 경제규모)가 5천억 유로 이상
  - '연관 경제규모가 4천억 유로 이상' · '대체지수의 개발이 어려운 경우' · '해당 벤치마크의 산출이 중단되거나 해당 벤치마크가 시장 및 경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에 기초해 산출될 경우 가계, 기업, 금융기관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·금융안정·소비자 보호·시장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'
- ➡ 연관 경제규모에 관계없이 규제당국이 핵심 벤치마크로 지정 가능

## ❖ 정보제공자의 의무

- 규제기관이 특정 금융기관에게 벤치마크 산출을 위한 **정보 제출을 의무화**
- 벤치마크 관리기관이 제정한 행위준칙 준수 의무
- 제공 정보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**내부통제 의무** ➡ '규제당국이 기술 표준안을 마련 중'

## ❖ 정보사용자의 의무

- 벤치마크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**벤치마크 산출의 중단에 대비**할 수 있는 문서화된 계획을 보유 ➡ 규제당국이 해당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권한

# EU 벤치마크(지표금리)법 III

## ❖ 벤치마크 관리자에 대한 규율

- 정보제공기관에 대한 행위준칙 제정 의무 ➡ 규제당국이 변경 요청 가능
- 벤치마크 산출을 위한 **정보(호가, 거래 금리)의 적정성 확보 및 검증, 벤치마크 산출 방법론의 공정성과 투명성** 확보, **공시체계**의 마련 ➡ 법에서 기본 요건 제시, '규제당국이 기술 표준안을 마련 중'
- **이해상충을 방지**할 수 있는 내부 통제장치 설치 의무
- 벤치마크 사용자가 벤치마크의 구성과 산출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**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**할 의무
- 벤치마크 관리자에 대한 규제당국의 지정과 철회

## ❖ 규제당국의 역할

- 벤치마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제출 요구, 현장 검증 및 조사, 행위중단 및 가압류 권한
- 법에서 정한 항목을 위반시, 행위중단요청 · 부당이익 환수 · 관리기관에 대한 지정승인 철회 · 금전적 징벌 · 행정(관리) 조치

## 4. 정책적 시사점



- ❖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질적 성숙을 위해 거래정보의 보고와 지표금리의 산출 규율은 반드시 도입될 필요 ➡ 개별 입법이 아닌 '통합 규율체계'를 통해 구현
  - 거래정보의 보고는 국제적 규제정합성 측면 뿐만 아니라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올바른 정책개발에도 중요
  - 지표금리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장의 신뢰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도모할 필요
- ❖ 거래정보 보고정책은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이 바람직
  -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개별 금융기관이 직접 보고할 경우 전산시스템의 구축 등 비용과 과도한 업무부담이 발생



- ❖ 주요 지표금리의 산출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공적 규율체계로 편입해 **지표금리가 시장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**
  - 지표의 안정성을 위한 호가제출의 의무화
  - 시장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표의 구성 및 산출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 등
- ❖ 시장금리 및 거래정보에 대한 **체계적 공시제도의 도입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**
  -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직 정보의 공시에 대한 규율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으나, 최근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(보스턴 연준, 2016)

# 감사합니다